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대비훈련과 「예비군법」상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의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시.도지사가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참여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장관이 인력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훈련의 면제를 받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ㄴ.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람
- ㄷ.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노동력을 가진 65세의 남자와 노동력을 가진 55세의 여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ㄹ.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54세의 미혼 여성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제훈련은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해도 무방하다.
- ② 도상훈련은 대통령의 결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의료시설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④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아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제때 하지 않고 늦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甲은 45세의 기혼 여성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A항공사에서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에 거주하는 乙은 59세의 남성이며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이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丙은 39세의 남성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건설기계와 건설용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 丙의 건설기계와 건설용 장비는 중점관리 대상물자로 지정되어 있다.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丁은 54세의 기혼 여성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B식품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식품회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에 소재하고 있다. 丁은 현재 해외 여행으로 부재중이다.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부문의 인력훈련 및 물적자원훈련을 실시하려고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하였다.

- ① 甲은 인력자원이며,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甲에 대한 인력훈련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노은동장은 乙에게 인력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③ 丙이 물적자원훈련통지서와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명령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 丙은 예비군 훈련에 우선해서 물적자원훈련통지서상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지정된 사람에게 본인의 건설기계와 건설용 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광주광역시장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B식품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부하거나, 광산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장의 준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준비조치를 명할 권한은 주무부장관이 가진다.
 - ② 준비조치를 명하려면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③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을 명할 수 있다.
 - ④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설의 보강 및 확장을 명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감사원 사무처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는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는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5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홍보용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는 비축대상물자에 해당한다.
 - ④ 주무부장관은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무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대상인력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의 요청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당시에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중점관리대상인력이 2일의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보호에 참여한 경우에는 식비·숙박료, 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란 민방위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②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는 민방위사태에 해당한다.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은 민방위사태에 해당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지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된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및 재정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정책에 협조하고,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민방위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가는 그 설치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등 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각 분과위원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2인으로 임명하며,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ㄷ. 중앙민방위협의회의는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분과위원장으로 하는 재난구호대책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둘 수 있다.
- ㄹ. 중앙민방위협의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ㅁ. 중앙민방위협의회의는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 조정을 관장한다.

- ① ㄴ, ㄹ
- ② ㄷ, ㅁ
- ③ ㄱ, ㄴ, ㅁ
- ④ ㄱ, ㄷ, ㄹ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설치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진단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만성 허약자는 매년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기관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3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그 국가기관에 두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으로서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이 된다.
- ③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는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 ④ 2011년 3월에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2018년 4월 현재까지 재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에 해당한다.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폰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을 중복하여 편성할 수 있다.
- ②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 본인이 신청 하여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민방위 대원이 20명인 직장 민방위대는 같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 그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 ④ 직장의 장이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을 받은 자는 예비군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편성과 지휘·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통·리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이다.
 ㄴ. 인접한 두 개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한 경우 두 명의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들이 연합 민방위대의 활동을 공동으로 지휘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휘·감독한다.
 ㄹ. 민방위대의 지휘권은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제1순위로 행사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발령된 동원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는 형벌로 처벌되지만, 그 밖의 민방위사태로 발령된 동원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 행정안전부장관만이 그 동원을 해제할 수 있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보상금의 지급사유 중 국가가 비용부담주체로 될 수 있는 경우는?

- ① 민방위 대원이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 ② 민방위대요원이 전지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 ③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날로 정해진 날에 훈련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 ④ 민방위 대원이 읍·면·동장이 발령한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의 동장은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 ㄴ. 서울역(驛) 시설은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그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해야 할 운수시설이다.
- ㄷ.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홍수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ㄹ.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총리가 정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A ~ D 중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자원이거나,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예비역 준사관(準士官)인 A
-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로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兵)인 B
-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 3개월이 지난 보충역의 병(兵)인 C
- 현역병으로 복무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D

- ① A, B ② C, D
③ A, C, D ④ A, B, C, D

문 20. 국방부장관이 작전 임무수행의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관할 구역의 예비군대원인 A에게 송달하게 하고, 동원을 명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는 동원을 연기하려는 경우 동원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동원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을 명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A는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또는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 ④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A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21. 예비군법령상 훈련의 보류 또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에 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지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훈련을 보류받은 사람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진 후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그 근무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보류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이거나 훈련의 연기원서를 본인이 직접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수임군부대의 장인 甲이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甲은 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예비군대원 A가 甲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휴일이 아님)의 5일 전에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A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 ④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인 B가 甲이 공시한 훈련소집일 5일 전에 전자문서로 훈련 참가를 신청하면 B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문 23.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지역에 무장 소요가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명하였다. 이에 예비군대원 甲은 필요한 무장을 하고 A지역에 있는 무기고의 경비 임무를 맡게 되었다. A지역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 등 관리 임무는 경찰서장 乙이 위탁받아 하고 있다.

- ① 甲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경비할 수단이 있다면 필요한 최소한도라고 하더라도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乙은 무장을 위한 무기 등 관리 임무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③ A지역 예비군의 무장에 필요한 무기.탄약 등은 경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 ④ 甲이 과실로 무기고의 무기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2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방부장관은 무장공비가 침투한 강원도 A지역에서 무장공비를 체포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동원을 명하였다. 그리고 수임군부대의 장 甲은 무장공비의 도주도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해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자 이 지역 야산(X지역)의 출입 제한을 명령하려고 한다.

- ①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도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 ② 甲이 출입 제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출입 제한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강원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X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 출입 제한 명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25.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안에 들어갈 날짜로 옳은 것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甲의 재산을 제거하는 긴급조치를 하였다. 甲은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2018년 4월 10일(화요일) 제출하였다. 국방부장관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甲이 이를 2018년 5월 2일(수요일) 수령하였다. 甲이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의 말일에 재심청구를 하고 같은 날 국방부장관이 재심청구를 받는다면 ()까지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① 2018년 7월 1일
- ② 2018년 7월 2일
- ③ 2018년 7월 31일
- ④ 2018년 8월 2일

문 26.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甲은 수탁경찰서장의 동원 명령을 받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甲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3일간의 치료 후 국가의료시설로 옮겨 2개월간 입원해 있어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5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 ① 甲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가족으로 한다.
- ② 甲은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 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받는다.
- ③ 甲이 휴업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는다.
- ④ 甲의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2명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甲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 ② 甲이 위촉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甲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甲은 민간단체 대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문 28.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서 훈련참여기관인 군부대(군부대의 장 乙)와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2018년 6월 1일(금요일)에 1일간 실시하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위기관리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하여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甲은 2018년 5월 16일(수요일)까지 훈련일시 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乙은 합동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2018년 6월 11일(월요일)까지 그 결과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乙의 부대가 합동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甲이 부담하여야 한다.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 ㄴ.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ㄹ. 국무총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30. 산림자원이 풍부한 강원도 지역의 국립공원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甲은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乙의 건의를 받아 이를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甲과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은 위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② 甲은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 ③ 乙은 구조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소방청의 장은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乙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가 작성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32. A도 B군 지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도의 도지사는 A도의 행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B군의 군수는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생활기반의 상실 등 피해의 효과적 수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도의 도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B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B군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기준은 B군의 조례로 정한다.
- ④ B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국가가 특별지원으로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군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로서 긴급수송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재난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甲의 차량을 긴급수송 수단으로 확보하여 긴급수송에 종사하게 하는 응급부담을 부과하였다. 한편, A군의 군수는 인근 B군의 군수에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응원을 요청하였다.

- ① B군의 군수에 대한 응원요청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따로 협의가 없는 한,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B군이 부담한다.
- ② 甲은 A군 군수의 응급부담 조치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대해 A군의 군수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응급부담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수송에 종사하게 하는 응급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 ④ 甲이 응급조치 활동을 하다가 임신한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두고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태아를 포함한 3명에게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 ③ 사고 위험이 있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로서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2천명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 단위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 35. 대한민국 영역 내의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 선박 사고가 발생하여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다.
- ② 위 재난의 경우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한다.
- ③ 대규모재난에 해당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이 된다.
- ④ 위 재난현장에서는 재난구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법령 I - 헌법

문 1. 정치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치자금법」상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 ② 불법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정치자금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다.
- ④ 「정치자금법」상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문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 징계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②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금지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3.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을 둘러싼 법률 규정 자체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될 것이나, 다만 위임 규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률 자체에서 해당 부분을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명확성의 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
- ④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문 4.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②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③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④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궐위’에 해당되나,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경우에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5.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은 국무총리 이외에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명의 부총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 ② 국무회의는 집행부 내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이므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군사정책으로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면 사전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친 경우라도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없이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통령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문 6.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의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방법과 목적은 물론이고,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 ③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예컨대 시위참가자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문 7. 국회의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교섭단체에 소속될 수 없다.
-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 8.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만 한다.
- ②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③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이동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공개 원칙은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되며 소위원회의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채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소수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은 의사공개 원칙에 위반된다.

문 9.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정재판부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③ 당사자비용을 제외한 심판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는지 아니면 패소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그 상대방인 패소자에게 반드시 부담시켜야만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
-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데,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문 10.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② 1948년 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1972년 헌법에서는 부칙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문 11.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②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혼인의 자유의 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 ③ 교도소장이 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는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문 12.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권에 대한 헌법 규정과 다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ㄷ.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ㄹ.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ㅁ.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문 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③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외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문 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피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모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15. 헌법재판소의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판단누락’도 재심 사유로 허용된다.
- 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입법자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만 매몰되어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제반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ㄷ.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 ㄹ.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u>ㄱ</u>	<u>ㄴ</u>	<u>ㄷ</u>	<u>ㄹ</u>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